

## South Korea

2005년 7월 채택된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에 언론에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억압적 조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제외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언론에 대한 특이할 만한 억압적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사사건건 비난 받고 있는 보수언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특히 신문법의 타겟이 되고 있다. 신문법을 통해 신문시장을 어느 정도 주도하고 있는 이 신문들로 하여금 직원들과 독자들로 구성된 내부 ‘편집위원회’와 ‘독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급방식의 개혁까지 요구하고 있다.

7월 MBC TV의 이상호 기자는 90년대 기자들을 포함한 사회지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도청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불법도청을 당한 사람들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이 사건만으로도 정보기관이 기자들을 정기적으로 감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월 문화일보사는 자신들의 기자들이 정보기관 내 부정에 대한 기사를 보도한 이후 정보기관에 의해 불법도청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정부로 하여금 언제든지 출판물에 대한 제재와 친북 웹사이트 폐쇄등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고 있다.